

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

새누리의 진단

- 채무불이행자가 322만명에 달하지만 기존 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
- 획기적인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체계의 신설 필요

새누리의 약속

- 18조원 규모의 '국민행복기금'을 설립
- 금융회사 및 민간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개인의 연체채권을 매입하고, 신용회복 신청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하여 장기분할 상환유도
- 채무조정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전제로 일반채무자는 50%, 기초수급자처럼 어려운 분들은 70%까지 채무를 감면하여 상환부담 대폭 완화

새누리의 실천

- '국민행복기금' 설립

서민의 과다채무 해소

새누리의 진단

- 금융회사 여러 곳에 부채를 갖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채무조정이 시급하나, 적절한 채무조정 경로가 미비
- 다중채무자는 생활자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향이 있어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

새누리의 약속

- ‘국민행복기금’을 활용하여 1인당 1,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%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하여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
- 신용회복위원회의 ‘프리 워크아웃제도’의 적용대상을 확대(현행 채무불이행 기간 연속 30일 초과 90일 미만 → 1년 이내 연체일수 총 1개월 이하)하여 다중채무자의 조기 신용회복을 지원
-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민간 자산관리회사에 매각시 채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제도화하여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강화

새누리의 실천

- ‘국민행복기금’ 설립

학자금대출 부담 경감

새누리의 진단

- 학자금대출제도는 저소득층의 대학교육 지원책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나,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불이행자 문제가 발생
- 전체대출자 대비 신용유이자 비중이 꾸준히 상승(2010년 1.73% → 2012년 6월 2.03%)하고 있어 점차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위험

새누리의 약속

- 학자금대출 연체 채무의 경우 ‘국민행복기금’이 일괄 매입하여 취업 후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추심을 중단
-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의 50%까지 감면해 주고 장기분할상환하도록 부담을 경감
- 2010년 시행이 시작된 ‘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(ICL)’ 이전 제도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서, ICL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

새누리의 실천

- ‘국민행복기금’ 설립

개인신용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 제고

새누리의 진단

- 담보제공 능력이 없는 서민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인 신용평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
- 개인신용평가의 공정성이 확립되어 금융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

새누리의 약속

- 금융이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, 이의제기 경로를 제공 (항변권)

새누리의 실천

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개정

대부업을 금융감독망에 포함하여 소비자 보호강화

새누리의 진단

-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서민이 늘고 있으나 대부업체가 금융감독 대상이 아님에 따라 소비자 보호가 미흡

새누리의 약속

- 대부업을 금융감독원의 공적 감독대상으로 편입하고, 일정한 자본금 및 인적 요건을 부과하여 무자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
- 중소 대부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여 소형업체 난립에 따른 경쟁질서 훼손과 소비자 피해 방지
- 대부업 자율규제기구를 지정하고, 금융감독원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감독체제 구축

새누리의 실천

- 「대부업법」 개정

금융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한 법규 및 관행 개선

새누리의 진단

- 개인대상 대출영업 과정에 대한 적절한 규제감독이 없어 약탈적 대출과 과잉대출의 원인으로 작용
-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여전히 만연하고, 금융회사 위주의 영업관행이 시장을 지배

새누리의 약속

- 약탈적 대출, 불법추심 등 대출관련 금융회사와 추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출소비자 보호법규 도입
- 보험, 신용카드 등 각종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근절을 위한 법규를 도입
- 연금상품 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, 투자자의 금융회사 성과비교가 용이하도록 비교 공시체계 구축
- 금융수수료, 영업관행 등을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정비

새누리의 실천

- 대출소비자 보호법규 도입 (현행 관련개별법규에 도입하거나 별도 입법)
- 금융위원회내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금융관행 개선 추진